

大學入試, 이렇게 全廢할 수 있다

부모가 대학의 학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대학입시도 없어지며, 입시학원·과외공부의 경비가 한푼도 들지 않고, 대학의 내용은 더 충실히진다면… 그것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東京대학 대학원(석·박사)을 나오고 10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여장학금을 갚아오다가, 89년 봄, 겨우 교수 공모에 합격한 이 40대 조교수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에 제시했다. <J.F>

하시즈메 다이사부로오
橋爪大三郎
(東京工業대학 조교수)

세 상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척척 풀리는 일이, 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드물게는 있을지도 모른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①마냥 축 들어져 있는 것 같은 대학이 활기를 되찾으며 대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새로 시작한다.

②입학시험에 사실상 없어지고, 수험지옥이 해소된다.

③전일본의 부모들을 괴롭히는, 교육비의 압박이 제거된다.

④그리고 정부 재정지출도, 해마다 상당히(3천억엔 정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곧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묘안이 있을 것 같다. 우선 나의 플랜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포인트는 대학의 학비를 부모가 아니고, 학생본인이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등록금만 내면 누구나 입학을 인정한다. 학생은 가진 현금이 없을 테니까, 대학이 장기의 론(貸與)을 설정한다. 변제를 집단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조직

한다. 등록금을 코스트 상응, 곧 지금의 몇 배로 인상하는 대신, 장학금의 테두리도 한껏 확충한다. 될성부른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돌아올 만큼 지급하도록 한다. 대학의 재정도 안정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사학(私學)조성금 따위에 기대지 않는,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활력을 되찾는 한편, 입시경쟁도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이것이 대체적인 청사진이다.

그처럼 일이 척척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쪽 저쪽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았으나, 잘 되지 않을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장학금 반환 면제의 모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발단은 일본육영회(育英會)의 장학금제도를 곰곰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불합리한 것 이구나 하는 실감을 한 것이 계기였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죄송한 일이지만, 나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토오쿄오대학의 대학원(사회학 연구과)에 1973년 4월~1978년 3월에 걸친 5년간 재적했다. 석사과정의 2년간은 월액 2만 7천 엔, 박사과정의 3년간은 월액 3만엔, 일본육영회의 장학금을 받았다. 대여의 총액은 202만 8천엔. 이를 현재 무이자의 연부로 변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년 4만 8천엔+7만 3천엔=12만 1천엔씩 변제했으며 잔액은 81만 8천엔. 내년에는 석사의 뭉을 다 갚게 되

며, 그 후로는 매년 7만 3천엔씩 변제, 1998년(平成10년)도에 부채가 제로로 될 예정이다.

대학원은 연구자의 달걀 시절이다. 수습의 준비며 또 이런 저런 일로 상당히 바쁘다. 그러므로 육영회의 장학금은 무척 고마웠다. 현재의(1989년:平成元年) 대여월액은, 석사 8만 3천엔, 박사 9만엔으로 인상되었다. 내가 받을 무렵의 대충 3배(라는 것은 변제액도 3배). 모든 것을 메우기에는 모자라겠지만, 자택통학을 하는 원생의 경우, 학비·연구비의 상당한 부분을 커버할 만한 액수이다. 모자라는 돈은 그런대로 힘을 들여, 각종 아르바이트로 충당해간다. 공교롭게도 장학금 선발에서도 빠지고 더욱 하숙생활을 하거나 하면 원생의 부담은 비명이 나올 만큼, 최악의 상태가 된다.

그런데, 육영회의 장학금에는 ‘반환면제’ 제도가 있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免除職이라고 함)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대학원시절의 차용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대학원생은 대체로 그런 직업을 가질 예정이므로, ‘대여’라고 해도 ‘급부(給付)’(받은 것)나 같다는 감각이다.

나도 또한 자신이 매년 12만 1천엔을 변제하는 지경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버 닉터(OD)라고 해서, 대학원을 수료해도 좀처럼, 취직자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오쿄오대학의 사회학과의 경우만을 두고 말하면, 문제는 아직 그다지 심각하지 않으므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0년 이상이나 공모에 계속 떨어지고, 바로 얼마 전까지 무소속이었던 나같은 경우는 예

외 중의 예외지만, 전문분야나 대학에 따라서는, 취직이 되면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꽤 듣는다. 그러므로 대학원을 갓 나온 후 면제직이라는 자리를 따게 되면, 자신의 행운을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순도 생긴다. A씨는 다행히 대학에 취직이 되어 매월 봉급을 받는데다가 장학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B씨는 허망하게 OD의 신세가 되어,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면제직을 갖지 않았으므로, 빈약한 수입 중에서 장학금을 갚아가야만 한다. 엎친데 덮치는 격, 우는 얼굴에 벌쏘인다(雪上加霜과 같은 뜻)는 것은 이런 경우이다.

B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례도 있다. 대학의 '비상근(시간)강사'(이는 '면제직'이 아니다)를 하면서, 5년 이내에 상근직을 갖게 되면, 한몫으로, A씨와 똑같이 면제를 받게 된다. 비상근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만 한 급여로, 웬만한 경우는 도저히 해나가기 어려운데, 육영회의 '전차금(前借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단에 서는 B씨가 많다. 사립대학의 경영의 저변을 버티고 있는 비상근 강사는, 이렇게 공급되는(부분도 있는) 것이다.

*

연구(무엇을 생각하는)에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은 생산재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윤이 적은 비상근 강사로, 아깝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면 큰일이다.—나는 장학금을 변제하기로 했다. 한달에 1만엔 남짓의 출비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래부터 내가 쓴 돈이다. 더구나 무이자의 20년 할부라면, 반은 거저나 마찬가지

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막상 변제를 시작해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다. 쓸 때는 간단하지만, 갚을 단계가 되면 부담이 되는 것이 빛이다. 이것도 인생의 진실이 아닌가. 빌기만 하고 갚지 않는 빛이란, 본인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나도, 장학금을 갚을 수 있었으므로, 취직을 해서 제대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더구나 변제를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변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그 돈을 원금으로 돌려, 장학금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반환면제 같은 제도를 없애면, 인원도 금액도 배는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김에 이자도 받는다면, 수입제한 같은 것도 폐지할 수 있다: 현재 육영회의 장학금은, 1종=무이자, 2종=유이자의 구분이 있으며, 2종에서는 收入制限이 약간 완화된다). 도대체가 다른 대학원생이 부모의 수입의 다과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 있다는(수입제한) 현상이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육영회의 장학금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다. 한데 이야기를 반드시 육영회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학금의 충실성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열쇠가 달려 있다. 진실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사회인)에게는, 경제형편에 구애받지 않으며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부학생의 장학금 수급률(일본육영회)은 현재 12.6%, 대학원(석사 33.5%, 박사 55.0%)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육영회식의 장

학금 발상에 매여 있는 한, 이 숫자를 비약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현재의 대학에는 개혁해야 할 일이 무척 많지만, 그중에서 장학금의 개혁을 기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합리성이라는 점에서, 학부교육에 매스를 대보면 될 것 같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는 대학

대학입시가 일본의 교육을 일그러뜨리고 있다. 고교생, 중학생을 시험으로 몰아붙이며, 국민학생을 학원에 틀어박는다. 잔손질로 시험제도를 주무를 때마다, 사태는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특히 공통 1차라는 입시제도 아래, 편차치가 버젓이 행세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가 완성되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대학은 공동(空洞)화하고 말았다. 대학 4년간만은 좀 느긋이 쉬게 해 줘요.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한껏 지쳐 있다. 취직을 하면 또 죽도록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선택도 그것대로의 합리성은 있으나, 사회전체로 보면 이런 낭비도 없을 것이다. 전일본에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대학중에서,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는 것은 몇 할이나 될 것인가. 대학을 유원지로 아는 일이 당연해진다면 이미 끝장인 것이다.

*

대학의 본래의 모습을 찾자면,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본래가, 학생(이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면학을 하려는 자기노력(자기교육)의 기회를 원조하기 위한 기관이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지

금은 입학시험이 너무 어려워져서, 거꾸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거기다가, 국민학교에서 고교까지의 보통교육의 마당을, 상급학교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버려, 대량의 공부혐오증, 학교혐오증을 빚어내고 있다. 학교는 차별과 사회적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최대의 온상 같은 것이 되었다.

고교까지는, 누구나 같은 것을 배우는 보통교육의 마당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단계에서 자격시험, 단위인정시험 같은 것을 보이는 것은 괜찮다고 하겠지만 무턱대고(편차치가 행세를 하게 하는 따위의) 경쟁시험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은, 한사람한사람의 다종다양한 능력이다. 그것을 일원적인 척도로 쟁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안겨 준다면, 그렇게 해로운 일이 없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누구나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신이 잘하는 전문적인 공부를 한다. 거기서는 당연히 경쟁이 있어도 좋다.

배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기노력을, 제도의 핵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은 고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에 나와 활약하면서도, 다시 한번 전문적인 공부를 할 필요를 느낀 미드 캐리어의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하기 위해, 문화와 학문의 진실된 모습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 외국으로부터 장래를 촉망받으며 오는 사람들. 모두 대학에 모이면 좋지 않은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의 기회비용(機會費用)을 부담하는 사람은 모두, 대학에 재적할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입학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입학시험은 없어도 된다. 다만,

학점의 단위인정은 훨씬 엄격하게 한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졸업은커녕, 진급도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재적하고 난 전문교육의 마당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를 잘 못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다.

자신의 장래를 믿고 자신에게 투자한다. 그것이 '자기 장학금'이다. 이것을 대학개혁의 기둥으로 삼자는 것이다. 문제를 대학에 맡겨 놓으면 언제까지고 해결이 나지 않는다. 지금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무슨 수라도 강구해야 한다면, 어지간한 비상수단을 쓰지 않는 한, 별 도리가 없다.

*

일본의 대학은 어디나 어슷비슷해서 특색이 없어졌다. 편차치를 대중해서 수험생은 아마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적당한 랭크의 대학을 목표로 한다. 신입생에게 물어보면, 모두들 놀랄 만큼 저희 대학에 대한 것을 모른다. 이 대학의 이 학과, 이 선생이 아니면, 하는 그런 식의 지망을 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옛날에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극단적으로 싸서, 장학금을 대신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사범학교도 있었다. 사립대학은 각각 독자의 교풍이 있었다. 지금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보다 조금 쌀까말까할 정도이다. 사립대는 사립대대로, 경상비의 거의 절반을 국고의 사학조성금으로 충당한다 (1988년에는 2천 4백억엔). 국가가 재정을 줘고 있는데다가, 대학 설치기준에도 묶여, 자체적으로 하려는 의욕마저 잊고 있다. 사학이라고는 이름뿐이고 절반은 국립대학

이나 같은 것이다. 좀더 콘트롤을 풀고 대학마다의 자주성에 일임하며 특색있는 교육으로써 서로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대학이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면 기업으로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교육에 투입되는 자원(경비)을 등록금 등으로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의 안인데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채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독선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합리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립대학이, 사학조성금 없이 해나갈 수 있다면, 대학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탄력적인 커리큘럼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좋다, 교육의 알맹이로 승부를 한다는 사학 본래의 의욕도 생긴다. 문부성(文部省: 文教部)은 규제완화를 꺼릴 테지만, 교육도 정 보도 공급과잉인 이 시대에, 규제따위는 없는 것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부모가 등록금을 내니까 안 된다

그런데, 교육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교육을 받은 본인이다. 그것이 본인의 인생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모른다. 아울러 수입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물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 곧 사회에도 이익이 있겠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다.

교육비의 부담이 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둘이나, 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큰일이다. 주택부금이며 늙은 부모의 봉양, 자신들 부부의 노후 준비 등 돈이 얼마든지 든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학비를 짜낸다는 것을 생각

하면, 아무 대학에나 진학한다는 것도 곤란한 일이다, 상황은 이 정도에까지 와 있다.

부모의 경제력의 유무로 자녀의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국비(세금)가 사용된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싼(단순계산이지만, 국립대학의 총예산을 학생수로 나누어 1인당 경비로 환산해 보면, 그 10분의 1도 안 된다)것도, 사립대에 많은 조성금을 내주고 있는 것도, 육영회의 경비 대부분을 국고의 차입금으로 꾸려가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이다. 확실히 국비로, 일부 고등연구·교육기관의 경비를 꾸려간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이만큼 대중화한 오늘날, 대학에 가는 비용을 세금으로 꾸려간다는 것은, 도리어 불공평을 확대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자녀가 없는 부모도 있다. 자녀가 있더라도, 모두 대학에 간다고만도 할 수 없다. 일부국민을 위한 고등교육의 거액의 경비를, 모든 국민이 똑같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

넉넉한 가정의 외아들이든, 가난한 집의 막내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곧,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만을 따라,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가장 첨경이다. 부모가 나서지 않고 자신의 결단과 책임으로 다른 데서 학비·생활비를 차용한다. 그리고 교육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해 간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어린애같고 유치해져서 걱정인데,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꿋꿋해지며 정신연령이 4, 5세는 올라가지나 않을까.

문제를 모두 금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것은 어른들로부터의 메시지이다. 돈의 의미는 누구나가 잘 안다. 인생길을 마침내 출발하려는 젊은이가, 부모에게 매달려 고생도 모르며, 대학시절을 놀면서 지내는 현상은 볼썽이 사납다. 그보다도 사회(를 대표한, 대학이나 은행이나 민간의 장학기관)에서 학자금의 입체를 받고, 그 기대와 책임을 단단히 씹어 새기면서, 자신이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의 장래와 진로(그리고 물론 변제계획)를 설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느 사회에도 이니시에이션(성인을 위한 통과의례)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그것은 우선 대학입시인데,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영문도 모르는 채 치르는 피작위체험(被作為體驗)과 몽땅 부모품에 의지하는 4년간의 휴가라면, 도리어 해로운 일이 아닌가. 사회의 모델의 에센스를, 젊은 청년에게로 끌어당겨, 그 사회에서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각오를 촉구하는 것이, 이니시에이션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학금을 받고(사회와의 계약을 교환하고) 진학하는 편이, 얼마나 명쾌한 일인가

*

학생 한사람한사람의 장래는 불확정적이고 망막(茫漠)하다. 최초의 의지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요절하고 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다 합치면, 그 대부분이 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다. 떼어먹히는 일이 없다. 그들은 일본의 장래 그 자체이다. 연대해서 책임을 지면 보험과 같은 뜻도 생겨, 회수가 확실한 대부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대학의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입시도 실질적으로 없어지며, 입시학원이나 과외공부의 경비 등(이는 통계에 나타나기 어렵다)도 제로가 된다면, 중고년층의 가계는 상당히 피할 수 있다. 최근 연공임금 체계의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점에서도 플러스이다. 또 어느 세대나 자신의 교육·노후의 출비만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세대간의 불공평도 막을 수 있다.

대학獨自의 등급별 장학금을

그리면, 가장 중요한 장학금인데, 대학이 창구가 되어, 학생의 요구에 따라 대부를 한다. 공고(公庫:住宅·사업 자금을 대부하는 정부기관:金庫)금융 같은 이미지이다.

대학경비를 등록금으로 꾸려나가려면, 등록금을 현재의 몇 배로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 플러스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주도록 한다. 지금 물가로 치면 대체로 1인 1년 300~400만엔(약 1천 500~2천만원)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장학금에도 이율이나 변제의 조건 등, 많은 등급을 마련해, 진지하게 노력하며 착실히 학점을 딴 학생이나, 전공과목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린 학생은 활약의 정도에 따라, 점점 조건이 좋은 장학금으로 대체해 가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대학이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학생이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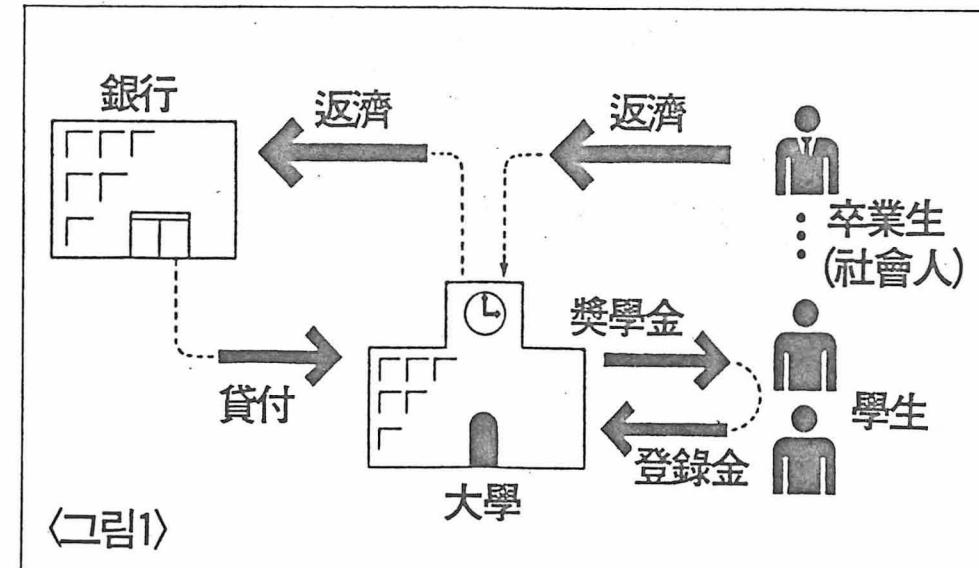
①극히 우수해서 대졸 초임만큼의 급부(갚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특대생). -인원수는 적지만, 그 대학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만한 학생들.

②그만은 못하지만, 그 나름의 특전(무이자, 또는 저리의 장학금 대여)을 받는 학생(여기도 몇 단계가 있다). -상급생이 될수록 이런 학생의 비율이 많아진다.

③아무런 특전도 없는(시중 금리와 같은) 장학금의 대여를 받는 학생.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회인이나 중고년층의 인사들도, 이 테두리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다.

*

대학은 장학금을 통해서 일종의 재분배를 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안하는(혹은 결과가 덜 좋은) 학생이 더 많은 부담을 하며, 상대적으로 더 공부를 하는 학생을 지탱하는 것이다. 불공평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③의 학생은, 남에게 인정받을 만큼 학업이 몸에 붙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적성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자신의 의사로 대학에 들어가 있(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한 비용(자신이 받는 교양 서비스의 경비)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는데, 대학에서 다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현상보다도 그 편이 훨씬 좋다. 또, ①의 학생은 남들이 이상으로 학업에 전념하며, 더욱 장래 사회에서 크게 공헌할 것 같으므로 다소간의 장학금 정도는 싼 것이다(정말은 금액보다도 명예, 복돈아 주는 일이 중요하며, 복돈아 주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대학만의 장학금은 편파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대학과 관계가 없는 장학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좋다. 경제조건·



〈그림1〉

종교·특정분야·출신지역별·외국인 대상 등등. 대학별 장학금과 이런 종류의 장학금이 양립하며, 한가지에 우수한 타입인 사람들도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한편, 연구자: 학자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은, 취지가 다르므로, 대학별이 아니고—全員賃金形의—육영회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원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만).

*

물론 장학금의 개혁만이 아니고, 학점의 인정을 엄격히 해서,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는 한계선을 분명히 해둔다. 공부를 하든 안하든 결과가 같다(졸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누구나 애써서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학업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본인에게나 사회에나 좋은 일이므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답을 하도록 한다. 대학은 공부를 하는 장소인 것이다. 그런 당연한 일을 이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대학에 있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든지, 혹은 거기 상응하는 등록금을 부담하든지 어느 쪽이든. 다만 재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언제까지나 졸업을 못한다. 입시에만 합격하면 나중에는 누워서도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따위 일은 이제는 없다. 이상의 요점을, 돈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간단히 그림으로 종합해 본다.(그림 1).

어떻게 入試가 없어지나

이 장학금제도가 잘 되면 입시는 없어진다. 입시를 없애려면, 우선 입시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시는 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재를 스크리닝(체로 걸러내는 것)하기 위해서이다. 한사람한사람을 보기보다도; “○○ 대학이면 안심” “××대학? 들은 적이 없는 데” 하듯이, 대학에 딱지를 붙여버린다. 유명

대학이란 입시가 어려운 대학을 말하며, 그 대학 학생이면 일정한 '품질'이 보증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 손을 대지 않으면, 대학의 서열화→입시경쟁→편차치(점수매기기)교육, 이라는 연쇄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인재의 스크리닝을 없애려면, 그보다도 더 섬세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재평가의 방법을 창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장학금의 등급화도 필요하다.

*

지망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으니까,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원자를 잘라내는 대신에, 입학정원 쪽을 늘린다, 곧, 모두를 입학시켜 버리면 어떨까. 거기까지 할 정도가 아니면, 개혁같은 것은 하지 못한다(정원이 어찌나, 보유 도서의 권수가 어찌나, 교육의 알맹이에는 관계가 없는 규제만이 복잡한 대학 실치기준은 이 기회에 젖혀 둔다).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도 입학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킥 아웃(반년이나 1년 안에 제적)시키든지, 자꾸 낙제를 시킨다. 졸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지원자도 덮어놓고 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일부 대학에 인기가 집중된다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한쪽에서는 정원 미달로,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대학도 반드시 생긴다. 그런 대학의 캠퍼스를 몽땅 사들여 정원을 늘리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혹은 근처의 빌딩을 빌어도 좋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이란 어떤 대학을 말하는 것일까. 취직실적이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반드시 교육

의 알맹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적 이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이 모여들며, 그것을 기업도 좋아하며 채용한다. …이와 같은 관계가 매년 되풀이되어 왔을 뿐이다.

새로운 장학금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어느 대학이건, 좋은 조건의 장학금을 받는 우수한 학생을 기업이 버려둘 턱이 없다. 전공학과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직접 실무에서의 대응능력도 평가될 수 있다. 더구나, 종이 한장의 성적표와는 달리, 대학이 말하자면 생돈을 들여 내는 장학금은, 물타기 불림을 할 도리가 없으므로, 어느 대학의 판정이나, 일단 신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유명대학'을 나와도, 성적이 시원치 않으면, 이제는 별볼일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그러므로 일부대학에 집중되는 '혼잡현상'도, 그다지 걱정 안해도 된다).

한사람한사람의 제대로 된 학력증명이 있으면, 대학의 간판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서열화도 의미가 없어지며, 무리한 입시도 없어진다. 적어도 장학금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면, 점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 보다, 어떤 장학금을 받느냐는 쪽이 중요해지면, 대학간 격차는 실질적으로 소멸되고 만다. 공립국민학교에는 특별한 격차같은 것이 없는데, 대학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학은 오히려 독특한 교풍으로 학생을 끌어들이려고 할 테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학의 자유화도 아울러

대학이 똑같은 씨름판에 서서, 서로 교육 서비스의 내용으로 경쟁을 한다. 이것은 학생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좋은 일이다. 사회의 요청에 따라 변모해 가는 유연성을 대학은 가져야만 한다.

어느 대학에나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생은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플러스인가를 비로소 본격적으로 생각한다. 거기서 대학의 참다운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학생이, 이 대학, 저 대학을 겹치기로 다니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성을 발견하면서 필요한 학점을 확보해 놓고, 되도록 조건이 좋은 장학금의 대학을 졸업하도록 한다.

대학의 이동의 자유를 막아 온 것은 이른바, '학교간 격차'와 입시의 벽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둘 다 없앨 수 있다. 대학간의 학점의 상호교환성을 100% 인정하고, 대학과 대학이, 그리고 A교수와 B교수의 강의가, 교육의 질을 서로 경쟁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

학생에게 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교원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일본의 대학 교원만큼, 경쟁도 없고 만사 태평인 직업은 드물다. 학생만을 다그칠 수도 없으므로, 업적을 올리거나 말거나 대우가 같은 것이라면, 애를 쓰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학생이 교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

행으로, 겨우겨우 끌고 나가는 강의도 많다.

대학의 교원은, 교육과 연구의 양면으로 기대(평가)를 받으므로, 따지자면 복잡하지만, 그런 점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자면—학생에게 인기가 있고, 실력도 있는 교원은 그 나름으로 평가되고 대우도 좋아지도록 한다.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대학으로 발탁된다. 그런 일은 어느 업계나 당연한 일인데도, 어째서인지 대학은 그런 일과 인연이 멀었었다. 지금은 사학 조성금이라는 명목 때문에, 아무리 두드러진 교원이 있어도, 그에게(만) 봉급을 많이 줄 수는 없으며, 그런 인사의 관행도 없다. 그러나 그런 것도 손질을 해야만 할 것이다. 대학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로 생기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의 자유화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교원의 '신분보장'을 안 할 생각이냐는 말도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다. 실력과 실적이 있음으로써 신분보장도 있는 것이다. 버리는 손이 있으면 줍는 손도 있듯, 언제나 재취직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열려 있는 것이 참다운 신분보장이다. 학문도 일취월장하는 세상에서, 비상근 강사나 오버 닉터의 고생살이를 깔고 앉아, 태평스럽게 정년까지 근무할 권리같은 것은, 누구에게도 없을 것이다. 임기제든 강격제(降格制)든 얼마든지 도입해서 대학의 활기를 되찾았으면 한다.

바야흐로 거대한 지식산업으로 성장한 일본의 대학이지만, 내실은 빈약한 상태이다. 21세기에 상응한 대학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이만한 충격요법은 아무래도 필요하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분업을

그렇다고 해서 고등교육의 존재방식을 하나에서 열까지 자유(시장원리)에만 일임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구라는 것은, 당면한 채산으로는, 보통 계산되지 않는 것이다. 그곳에는 또한 다른 원리도 필요한 것이다.

가령 소수민족 언어의 연구, 기초적인 과학연구의 여러 분야, 금방 경제효과와 결부되지 않는, 그리고 학생이 확 몰려들지 않는 분야도 많다. 그러한 분야의 연구가 그러나, 인간의 지식의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소홀히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성하며, 연구의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정당한 일일 것이다. 국립의 연구기관은 그런 연구자에게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

그것은 그런데, 국립 '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측면을 생각하면, 사립대학과 구별해서 생각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립대학의 학생이, 사립대학의 학생보다도 나은 조건으로(가령 쌈 등록금으로) 졸업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생각을 하면) 꽤나 불합리한 일이다. 국립대학도 국립철도(鐵道)가 JR(민영철도)로 환생한 것처럼 사립으로 바꾸어 볼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

자기(自己)장학금을 생각한 김에, 대학개혁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교육과 연구, 물과 기름이라고 할 것까지

는 없지만 본래 모순되는 요소를 지닌 두 가지가, 모호한 형태로 혼합되어 있음으로써, 오늘날의 대학은 어중간한 것이다.

메이지·타이쇼오(明治·大正 : 1868~1926년) 같은 시대라면, 이 두 가지는 아마도 일치했을 것이다. 그 무렵이라면 또 몰라도, 오늘날의 대학(국민의 4할 가까이가 진학한다)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전문 연구분야에서 우수하다는 보증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과계(理科系)에서는 벌써 옛날에, 문화계(文化 : 文科系)에서도 뒤늦기는 했지만, 연구의 중심은 대학원으로 이행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를 분리할 것. 교육은 시장원리를 타기 쉬우므로, 자유화한다. 연구(및 연구자 양성)분야는, 세금 등 공공의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부는 사립대학에, 대학원·연구소는 국립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명쾌할 것도 같다. 물론 실제의 조직은 간단히 갈라낼 수 없겠지만, 방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대학도 국제화하지 않으면, 마찰의 불씨가 된다

일미구조(日美構造)협의가 이루어지며, 외국이 직접 일본의 사회구조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인의 사회운영이 자가류로서, 국제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페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참가역할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비관세(非關稅)장벽으로 보인다.

대학은 본래,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한 인류공동체의 공통지식을 획득·보급하는 기관

으로서, 처음부터 국제기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은, 그런 것을 잊고, 자신들만이 아는 방식으로, 하기 편리한 대로 운영해온 것인지도 모른다. 교원은 거의 공모되지 않는다(또는 공모라고 해도 유명무실하다)는 것. 교원의 자유로운 이동도 적다는 것. 그런 이유도 있고해서 외국인 교원이 거의 없다는 것. 입시가 어려워 일본인이 아니면 합격하기 어려운 데다가, 장학금제도가 지극히 불충분하다는 것. 밖에서 바라보면 이런 것은 모두 일본인의 태만, 국제성의 결핍, 폐쇄성으로 비친다.

미국은 지금까지 내쳐, 전세계에서 많은 학생·연구자를 그 나라의 대학에 받아들여 왔다. 일본이 받은 혜택도 헤아리기 어렵다. 거기 반해서 일본은 현재의 국력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만한 대학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 사회의 이력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의미에서 일본인에게도 열린 대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中央公論 1989년 12월호 'これで大學入試は全廢できる' 번역 이홍우)

사람들 / 이야기

● 鄭京和의 바이올린 소리

정경화(바이올린, 89. 10. 25. 등, 東京 산토리 홀)의 일본 연주회평. '특히(5일 후의 리사이틀은 좀 아쉬운 데가 있었는데) 협주곡의 밤 이틀째는 천재 정경화가 다시 한꺼풀도 두꺼풀도 벗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란 극찬.

'협주곡은 아키야마(秋山和慶)지휘/NHK 교향악단의 좋은 협연으로, 베토벤, 브람스 모두 치고의 연주를 보였다. 원래가 역연(力演)형이며, 정열을 모두 기울여 음악에 부딪쳐가는 정경화가, 그 특질을 충분히 남기면서도 여기서는 한껏 투철한 순수한 음악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남김없이 표현했다. 거기에는 과잉은 일절 없었다. 개성이 강한 그녀이므로, 단 한개의 선율에도 다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없는 뉘앙스나 감수성이 넘치는데, 무척 귀가 밝은 사람밖에는 알 수 없을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듣고 있노라면 감정의 숭고함과 풍요로움으로 가슴이 꽉 차고만다.' (音樂의友, 89년 11월호, 필자 宇野功芳).

같은 잡지 '옹가쿠노토모'에 정경화 연주(리카르도 무티/필라델피아 교향악단 협연), 드보르작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로멘스가 수록된 CD가 소개되었는데, '이른바 완벽한 테크닉이라는 평이 있지만, 그녀의 테크닉은 다만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고 음악의 정신을 읽어내는 감성과, 바이올린의 표현력과 그 독자성을, 분명히 완전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연주'라고 했다. (音樂의友, 89년 11월호, 필자 平野昭).